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66호
- 제 출 자 : 최진호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안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안 제5조)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 제6조)
-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안 제7조)
-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 제9조)
-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안전한 수산물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임.

나. 조례 입안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 증진 사무이고 제3호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이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또한,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계획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당부서 의견 검토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에서 시·도지사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상위법 저촉이라는 의견임.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식품 유통과	1	○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2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3	·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해양 수산과	5	○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4조제1항에서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는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 안 제6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반시민 및 단체 등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유해 수산물이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홍보할 수 있게 규정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관리 교육이 제공되어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수산물 안전성의 관심이 상향된 국제·사회적 환경에서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오염 검사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상위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가 시의 현황과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61호
- 제 출 자 : 현옥순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점검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점검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 별지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중 조례 제명을 변경함
(별지서식)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안건은 상시 점검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법에서 규정한 시설 중 안산시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제명)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함.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이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사전점검’ ‘사후점검’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점검 대상 시설, 점검시기 및 방법)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점검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시함.
- (점검반 구성) 안 제5조는 점검반 구성원, 인원, 임기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특히, 점검요원에 편의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관계 공무원의 의무) 안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 점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점검 요원 구성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등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내 31개 시·군 조례 관련 조례 제정현황]

조 례 명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 정 시 · 군	26개소
해 당 시 · 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과천시 등
비 제 정 시 · 군	5개소
해 당 시 · 군	부천, 시흥, 포천, 가평, 연천군

[타 시·군 점검요원 및 결과보고 관련 현황]

지자체명	구성방법	구성원	임기	보고기한
경기도	임명·위촉	1명이상(장애인 1명포함+센터요원+공무원)	없음	7일이내
과천시	위촉	3명이상(장애인 1명포함+센터요원+공무원)	3년	7일이내
광명시	위촉	3명이상(장애인 1명포함+센터요원+공무원)	3년	7일이내
화성시	위촉	2명이상(장애인 1명포함+센터요원+공무원)	없음	3일이내
수원시	임명·위촉	명시없음	없음	5일이내

• (임명)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신분 설정 행위를 말한다.
 (위촉) 특정 직무나 직책 등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59호
- 제 출 자 : 황은화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여, 장애인 후생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을 개정함 (안 제2조제2호)
- 최적관람석의 설치 시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최적관람석의 설치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로 함.
- (정의) 안 제2조에서 ‘공연장 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함.
- (사업비의 보조)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 대상을 ‘공공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확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띄어쓰기 표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상위법 저촉사항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내 31개 시·군 조례 관련조례 제정현황]

조 례 명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제 정 시 · 군	27개소
해 당 시 · 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광명, 과천시 등
비 제 정 시 · 군	4개소
해 당 시 · 군	부천, 평택, 시흥, 포천군

[우리 市 관람석 현황]

○ 문화시설(공연장)

구 분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보노마루	올림픽기념관
전 체 석	1,573	712	160(가변석)	197	416
장 애 인 석	18	8	2	2	4
법 정 석	16	8	2	2	5

○ 운동시설(체육관)

구 분	와스타디움	상록수체육관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전 체 석	35,000	2,535	1,069	1,106
장애인석	190	7	6	-

○ 노유자 및 수련시설

구 분	청소년수련관		안산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상록	단원		
전 체 석	197	193	176	-
장애인석	3	4	4	-

※ 설치기준(공연장,집회장,관람장,도서관 등) 관람석수의 1% / 2,000석 이상시는 20석이상 설치
[관
련근거 :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2]

[관내 공연장 등 설치사례 사진]

용 도	해돋이/달맞이	올림픽기념관	별무리	보노마루
문 화 및 집회시설				
운 동 시 설	와스타디움	상록수	감골	와동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상록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 별무리,보노마루 극장의 경우 장애인 다수 관람시 첫출좌석 비우고 앞열에 공간 제공

[관람석 대상시설 적용 관련법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용도별	대상시설	관람석 편의 기준적용 여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	의무
교육연구시설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권장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권장
운동시설	체육관	권장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경마장	의무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500㎡미만인 시설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60호
- 제 출 자 : 이진분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18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 (안 제6조, 제7조)
-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직원 대상 교육·홍보 (안 제8조)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안건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임.

나. 조례 규정 가능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소관 범위 여부,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함.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동일·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명	법령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3. 7. 18.
2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5. 15.
3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14.
4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3. 7. 17.
5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6. 30.

다.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의)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 대상 범죄”의 용어의 뜻을 정의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우선토록 규정함.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는 5년마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 규정한 기본·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대한 시의 사업 추진 근거와 그 범위를 규정하였음.
- (장애인 시설 점검 등)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시행 시 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함.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은 물론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따르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258호
- 제 출 자 : 설호영의원 외 10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17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제5조)
- 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안 제6조, 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안건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임.

나. 조례 규정 가능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소관 범위 여부,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함.
-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신·출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난임극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명	법령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2020. 05. 19.
2	경기도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2020. 01. 13.
3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4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3. 25.
5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2020. 09. 29.
6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4. 30.
7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04. 25.
8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 08.
9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6.
10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7. 12.
11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5.
12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2.
13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2023. 06. 30.
14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3. 14.
15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8. 04.
16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28.

다.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난임”, “난임치료” 용어의 뜻을 정의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우선토록 규정함.

- (지원대상) 안 제4조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게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등)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하도록 함.
- (비밀누설 금지)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

라. 종합의견

-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난임극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